

“자정능력 상실 유튜브… 방심위 권한 강화로 적극 대처를”

유튜브 “혐오 콘텐츠 허용 안해 정책위반 발견엔 위반신고 해야” 이용자 “신고해도 버젓이 게시돼”

매년 유튜브 콘텐츠 신고 늘어도 방심위, 인력부족 등에 조치 늦어

‘사이버 레커(Cyberwrecker)’ 유튜브 채널들의 범죄급 사건에 유튜브의 자정능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권한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이슈에 편승한 저질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을 일으켜 이익을 끌어 조취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유튜브 채널들을 뜻한다. 최근 EU와 프랑스 등이 해외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등 자국 법을 들어 제재에 나서기 시작한 만큼 우리 정부 또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메트로 경제> 취재에 따르면 사이버 레커 채널들의 연합체인 ‘레커 연합’ 유튜브 카라콜라(이세욱)와 ‘구제역(이준희)’ 등이 또 다른 유튜브 ‘썸양(본명 박정원)’의 개인사를 폭로하겠다는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사이버 레커 사건 후 각 유튜브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지만, 특히 유튜브 플랫폼의 자정 능력과 유튜브 각 콘텐츠에 대한 정부 기관의 제재 가능 여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는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사이버 레커’ 관련 이미지.

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알고리즘 조정, 정책 업데이트, 채널 및 영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모질라(Mozilla)가 MIT테크놀로지 리뷰 기고에 따르면 2만 명이 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7개월간 유튜브 활동을 분석해 사람들이 추천 알고리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가지 방법인 ▲싫어함 ▲관심 없음 ▲기록에서 삭제 ▲채널을 추천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가한 결과 이용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영상을 추천에서 거의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정책을 명백히 위반한 콘텐츠가 이용자의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추천되는 상황도 발견됐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시청자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콘텐츠 또는 타인의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발견하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들이 문제적인 콘텐츠를 신고하고, 때로는 집단 행동에 나선 후에도 문제 콘텐츠들이 버젓이 게시돼 있음은 물론 채널의 수익 창출까지 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다.

이용자 개인의 알고리즘에서 삭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이용자들이 원치 않는 저질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튜브 플랫폼 자체의 자정능력 상실에 대항할 방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차단도 있지만 이마저도 인력 부족 등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방심위는 유튜브 내의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심의하고 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구글과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김병욱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방심위를 통해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유튜브 콘텐츠는 총 1만 7446건으로 이중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시정요구 조치는 59.5%인 1만 38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658건 ▲2020년 4010건 ▲2021년 2015건 ▲2022년 6918건 ▲2023년 8월 말 기준

2845건으로, 매년 심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심의·시정요구 유형별은 ▲불법 금융·무기류, 욕설, 차별·비하 등 법령 위반이 1만 424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음란·성매매 1653건 ▲초상권·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848건 ▲도박 625건 ▲불법 식·의약품 51건 ▲디지털 성범죄 26건 순이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 법률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대해서도 일반 인터넷 정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레커 사건 또한 방심위의 심의 규정에 대부분 속한다. 그러나 지난 달 있었던 사이버 레커들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폭로 사건 당시 대부분 유튜브 영상은 제재를 받지 않았고, 이번 사이버 레커 협박 사건 또한 신속한 수익창출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방심위 자료를 공개했던 김병욱 전 의원은 “최근 유튜브에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가짜뉴스·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다”며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송출까지 책임지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가계대출 2.5% ↑… 전세대출 규제 손본다

5대 시중은행 대출잔액 710조 작년말 692조 대비 177조 급증 전세대출 DSR 포함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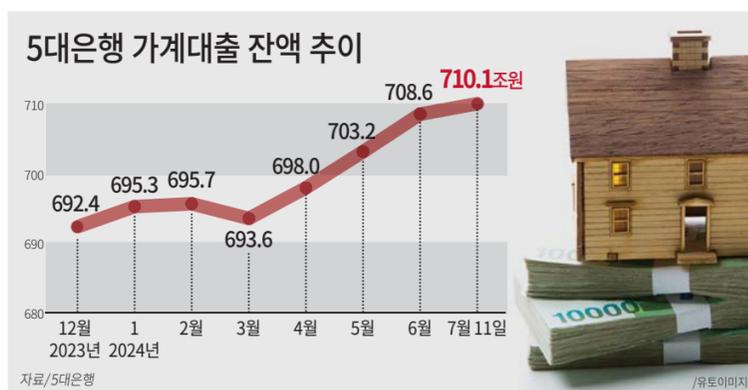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개월 만에 2.5% 증가했다. 당초 금융당국에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1.5~2%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1월 기준 710조 1225억원으로 지난해 말(692조 4094억원)과 비교해 2.5% 늘었다. 일부은행은 대출증가율이 3.4%가 넘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는 지난 4월 7만 3685건으로 올해 1월(6만 5974건)과 비교해 7711건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3월 4464건에서 4월 6725건, 5월 683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도 증가했다. 5대은행의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 3월 -2조 2237억원에서 4월 4조 4346억원, 5월 5조 2278억원, 6월 5조 3415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이후 1~



2개월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만큼 6월까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5대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장 가계부채가 2%를 넘어서고 향후 주택 매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점검은 8월까지 현장·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 규제를 포함해 DSR 규제를 어기진 않았는지, 당초 대출 목표를 크게 초과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상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적용할 경우 한도가 줄어들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백지화한 바 있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로 인해 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5000만원인 차주는 DSR규제(연소득의 40%)에 따라 내야 하는 원리금이 2000만원(월 약 167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금은 전세보증금의 80~90%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에 포함되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월세로 몰려 되레 주거비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무역업체 83% “해상운임 급상승 애로”

무협, 긴급 물류 애로 설문조사 기업 40% ‘물류비 증가’에 애로 21.5% ‘선복 확보 어려움’ 부담

홍해 사태 장기화와 중국발 밀어내기 물동량 증가 등으로 최근 글로벌 해상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수출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주 서안노선의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7월 8103달러(40ft 컨테이너 기준)로 지난 1월 2775달러 대비 약 3배 상승했고, 인도·동남아 노선을 운항하던 선박이 미주·유럽 노선에 대해 투입되면서 선복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도·동남아 노선 운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가 14일 발표한 ‘해상운임 급등 관련 긴급 물류 애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3.3%는 현재 수출입 물류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역업체 573개사가 응답해 지난 6월 21일~7월 5일까지 진행된 설문에서 수출기업의 40.1%(중복 응답)는 물류비 증가로, 21.5%는 선복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수출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부산항 터미널의 수출 컨테이너 반입허용일 제한(3일)과 잦은 선박 일정 변동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수출기업은 터미널 반입 제한으로 인해 컨테이너를 항만 인근 외부 장

치장에 보관함에 따라 추가 보관료, 상하차 비용, 내륙운송료 등 불필요한 물류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출입 기업들은 해상운임 상승과 물류 불안정이 올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 기업의 절반 가량(46.2%)은 올해 4분기 말까지 해상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28.4%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입 기업들은 물류 운임 부담 경감을 위해 ‘바우처 형식의 물류비 직접 지원(30.9%)’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및 운임 할인(23.9%)’, ‘항만 인근 물류창고 보관 지원(19.0%)’ 등 정책 확대를 원했다.

무협은 HMM과 협력해 해상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연말까지 매주 1000 TEU 규모의 선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우대운임도 적용한다. 또 한국해운협회와 협력해 인도·동남아 노선에 대한 선복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은 “물류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며 “무역협회는 물류 리스크를 적기에 대응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